이베로아메리카 제2집(2000년)

브라질의 민영화를 통한 재정적자 극복의 한계

김 영 철*

1. 들어가면서

1990년대 초반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80년대의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80년대의 경제불황의 원인으로는 심각한 외채누적과 이와 연관된 인플레이션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선택은 외채협상 과정에서 선택적 대안의 부재로 채택한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상으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취약성을 보이는 국제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과 연결지어 본다면, 국제경제의 호황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결론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70년대 초반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변화를 일별해 보면 이러한 관계는 더욱 뚜렷해진다.

1980년대의 경제위기에 대한 분석들은 국가주도 경제발전에 대한 분석보다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가 수입대체 성장모델인가? 아니면 수출주도 성장모델인가? 라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즉, 신자유주의나 신구조주의자들이 말하는 국가의 경제 정책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

* 부산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강사

다. 이는 수출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선택한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분석에서 비롯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선택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성장의 주체가 국가에서 시장 메카니즘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듯이 "작은 국가의 강력한 국가"는 시장 메카니즘을 통한 성장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국가이다. 이러한 국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무역 자유화, 민영화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영화는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보다는 국가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의 민영화라면 하나의 기업내에서 볼 때, 조직의 합리화, 생산성 증대 위한 개혁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영화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공기업들을 해체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내채와 외채)의 대부분을 생산성이 낮은 공기업의 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공기업의 매각은 현상적으로 이중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판매에서 발생하는 세입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다음으로는 정부가 부담하는 운영비,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들은 재정적자를 상쇄시키는데 있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민영화 이전과는 구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여전히 정책적인 수준의 대안이다. 이는 국가개입이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하며, 유사-시장 메카니즘에서 활동하는 경제행위자들을 통제하는데 있어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적자 극복을 위해 선택한 민영화 정책이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유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브라질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2장에서는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국가재정 확보의 주대상이 무엇인가? 살펴본다. 3장에서는 브라질의 민영화 추진 과정을 중심적으로 살펴본다. 4장에서는 브라질의 재정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고, 결론에서는 연구를 결과와 브라질이 이후 선택하게 되는 정책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민영화의 이론적 검토

2.1 민영화의 개념과 논리

민영화의 개념은 다양한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민영화에 대한 광위의 개념으로는 첫째,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사기업으로 이전하는 것 둘째, 탈규제화, 셋째는 공기업의 상업화를 지적하고 있다[1]. 이러한 요소들을 민영화가 하나의 뚜렷한 개념으로서 정태적이기보다는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사적인 혹은 시장에 의해 조절되는 메카니즘으로의 전환과정으로서 동태적인 현상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영화는 여전히 국가가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의 개입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민영화라는 개념내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민영화는 시장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수단이지 민영화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 즉, 민영화이후에도 시장의 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에는 다양한 간접적인 재규제가 경쟁의 효율성을 증시키는 방향으로

1) *Privatization in Brazil*, Brazil Center Speakers Series, Univ of Texas at Austin, October, 1995.

도입될 필요가 있다[2].

Hardin- Moore은 민영화의 논리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정부규제로부터 해방시켜 시장경쟁에 맡김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과 생산효율을 증대시켜 국가재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후생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에서 개인영리활동의 자유가 효율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자본주의 논리를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규제없는 민영화(Privatization without Regulation)라는 자유방임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3]. 이렇게 형성된 시장구조는 경합성(Contestability)[4]이 문제가 된다. 즉, 시장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매몰비용(Sunk Cost)[5]이 존재하더라도 기업간의 경합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구조라면 민영화 이후의 독점기업도 허용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자연독점을 형성하는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Swann-Sttelzer는 민영화 이후의 독점이윤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 보다 정확하게는 재규제가 불가피함을 주장한다. 이들은 Hardin-Moore가 주장하는 시장 경합성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경합적 시장의 존재에 필요한 기업의 비용조건이 매우 엄격하다. 둘째, 치고달리기 식의 시장경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진입장벽이 제거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이는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

---

2) 대한 상공회의소,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간부문의 역할 재조정, 한국경제연구센터, 1995. p. 10.

3) 앞의 책, pp. 12-16.

4) 한 산업내에 소수의 기업만이 존재하더라도 진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 이윤을 얻고 기업활동을 하다가 가격 등의 조건이 나빠지면 빠져나가는 식으로 잠재적인 진입자들이 치고 달리기 식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기업의 시장지배력 내지는 독점력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도 없고 독과점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5) 탈퇴시 이전의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마케팅, 이미지 등에 투입된 비용이 고스란히 복원되어야만 한다. 이것들은 바로 그 경제활동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일부는 포기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다. 셋째, 일시적으로 시장이 경합적으로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거기에서 조금만 이탈하면 시장의 성격은 급격하게 변화하여 경합성이 유지되지 않기때문에 시장구조의 유지를 위해 민영화 이후 재규제화를 주장한다[6].

이러한 민영화의 개념은 공기업의 사적인 부분으로 소유권의 전환을 의미한다. Ravi Ramamurti는 민영화에 대한 개념을 공기업에 사적인 소유권과 사적 경영의 요소를 지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7]. 이는 행정개혁과 경제자유화라는 정책적인 변화라는 측면으로 이해된다.

2.2 민영화 방법

민영화의 방법은 주식매각, 정부규제 완화, 프랜차이즈 제도, 및 대여제도 등이 있으며 국가별, 산업별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혼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민영화방법에서 국가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주식매각을 통한 민영화이다. 주식매각을 통하여 정부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어 국민의 세금납부 경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재정 보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영화는 개도국에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8].

---

6) 앞의 책, pp. 18- 23. 민영화의 성공조건으로 우선 공기업의 시장조건 즉, 공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시장경쟁성 여부이다. 두 번째는 국가의 경제환경과 규제능력이다. 정책기조가 시장지향적이고 규제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된 국가에서는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 갑용, 외 3인 공저,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1996. pp. 47-49. 민영화를 통한 시장의 경합성을 강조하는 외에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한계성과 결과들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V.V Romanadham, *Privatization: Constraints and Impacts*, V.V. Romanadham(ed), *Constrains and Impacts of Privatization*, N.Y, Routledge, 1993.

7) Ravi Ramamurti, The Impact of Privatization on the Latin American Debt Problem, Jo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34, No. 2, Summer 1992. p. 94.

8) 강 신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8. pp. 57-60. Jonas Prager, *Is Privatization a Panacea for LDCs? Market Failure versus Public*

첫째, 주식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주식매각의 정도에 따라 완전민영화와 부분적인 민영화로 나누어진다. 또한 주식매각 정도에 따른 분류와 함께, 주식 매각시 누구에게 매각할 것인가 하는 매수자 집단은 국민, 종업원, 법인 및 외국인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러한 민영화의 방법은 각 국가들의 민영화 추진 과정 속에서 결정된다. 특히, 외국인 참여지분의 인정에 대한 부분은 국내 정치적 상황과 민족주의적인 입장이 반영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발생한다. 또한 주식매각을 통해 민영화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청구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다. 이는 특정개인, 법인 혹은 기업이 대량의 주식매입이 가능하다면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식매각은 직접적인 소유권이전을 통한 민영화이며, 이와 함께 계약제도(Contractiong out)가 이용된다. 계약제도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생산을 일정기간 사기업이 담당하되 그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담당하는 제도로서 일정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의 분배나 공급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거나 대여하는 프랜차이즈 제도 및 대여제도 등도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한다. 프랜차이즈 제도는 상품 및 재화의 분배나 공급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게만 부여하는 제도이며 분류에 있어서 사업이나 지역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리고 대여제도는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되 기업전체를 사기업체제로 전환대여를 하게 되면 사기업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되었다[9].

마지막으로 이러한 직접적인 민영화 방법들 외에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규제완화를 들 수 있다. 즉, 정부가 민영화를 시도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개입하면 오히려 경제의 비효율성을 낳게되기 때문에 정부규제완화가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Sector Failure, The Jornal of Developing Areas, 26, (April 1992)

9) 위의 책, pp. 84- 87.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구조조정을 위해 민영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지니고 있는 모순적인 논리와도 일치한다[10].

2.3 브라질의 민영화론

Ross Shneider는 브라질 경제의 특징을 정치적 자본주의, 발전주의적인 국가, 관료를 통한 대표라는 하위 개념을 지닌 관료적 정치경제학으로 설명하고 있다[11]. 이러한 특징을 지닌 브라질은 1988년까지 기존의 경제 발전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영화를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탈규제와 외국자본의 참여부분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이는 제3세계의 민영화 원인이 선진국에서와 구별되는 공공부분의 생산이 기대했던 만큼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내부적인 자성과 IMF/World Bank의 공공부분의 축소를 요구하는 구조조정 차관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민영화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2].

브레세르는 브라질에서 1990년대 가장 큰 정치적 사안은 국가의 재조직과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70년대에 시작된 경제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써 신보수주의와 시장 지향의 경제개혁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국가의 위기원인을 세가지의 형태를 지적하고 있다. 즉, 국가의 재정위기, 사회·경제에서 국가개입 방법의 위기, 국가행정의 관료형태 위기로 특징지워진다[13]. 이러한 국가

---

10) 위의 책, pp. 88-89.

11) Ben Ross Scheider, "Partly for Sale: Privatization and State Strength in Brazil and Mexico", Jo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30. No, 4. Winter 1988-89. pp. 89-116.

12) Jonas Prager, p. 301.

13) 그러나 이러한 국가개혁에는 4가지의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 첫째, 민영화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규모를 축소시키는 정치-경제적 문제, 둘째 국가의 통제적 역할 재정의에 따른 정치-경제적 문제, 셋째,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과 재정능력과 통치력 회복과 같은 행정-경제적 문제 넷째 정부의

위기를 탈국가화 프로그램(Programa de Desestatização)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한다. 국가위기의 극복은 국가개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브라질에서 추진되는 국가개혁 프로그램은 첫째, 영구적인 재정조정 둘째, 정부의 과중한 부채축소 셋째, 사회부분에 대한 정부활동의 집중 네째, 국가주도 발전의 전략적인 부분을 사적인 부분으로의 전환 다섯째, 대내·외 부채의 축소 여섯째, 경쟁력 증가를 통한 국가산업의 현대화 촉진 일곱째, 자본의 확산을 통한 자본시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14].

따라서 브라질에서 추진된 민영화는 위에서 지적한 공기업의 소유권 이전, 탈규제화와 상업화라는 거의 모든 형태를 취하고 있다[15]. 브라질에서 추진되는 민영화의 목적은 첫째, 국가에 의해 방만하게 운영되던 부분을 사적인 경제활동으로 전환시키고, 둘째 민영화를 통한 공공부채의 축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국내외 자본의 투자를 증가시켜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넷째, 민영화를 통해 브라질 산업부분의 근대화, 다섯째, 연방정부의 투자와 노력을 근본적인 분야로 집중시킴으로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여섯째, 외국인 자본과 국내자본의 활성화로 브라질 자본시장을 강화시키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부세입의 생성과 공공부분의 사적부분으로의 전환을 지적할 수 있다. 민영화를 통한 세입은 공공부채를 축소하는 연방정부를 지원하는데 이용된다[16]. 따라서 브라질의 민영화는 경제 구조조정을 포함한 국가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었으며, 국가개혁은 시장역할의 확대와 국가재정 균

정치능력과 통치력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이다. Luiz Carlos Bresser Pereira, "A Reforma do Estado dos Anos 90: Lógica e Mecanismos de Controle", Segunda Reunião do Clãculo de Montevidéu, 25-26 4, 1997.

14) Elena Landau, "O Programa de Privatização : Resultados e Prospectivas", in João Paulo dos Reis Velloso(ed), Estabilidade e Crescimento : Os Desafios de REAL, Rio de Janeiro, José Olympio Editora, 1994. p. 223.

15) Ricardo Caldas, "Privatization in Brazil", Brazil Center Speakers Series, Univ of Texas at Austin, October, 1995.

16) Ricardo Caldas, pp. 3-4.

형이라고 할 수 있다.

2.4 국가재정론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1980년대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재정위기는 국가가 경제정책을 추구하거나 혹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성을 지니게 했으며, 또한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민영화가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재정적자 축소라는 선진국들과는 구별되는 논리에 의해 추진되었다[17].

일반적으로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를 대표하는 정부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원을 획득, 관리, 처분하는 활동, 즉 정부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의 기능은 자원배분의 기능, 소득분배의 기능과 경제안정화 기능으로 나누어진다[18]. 정부의 이러한 기능들은 시장이 하지 못하는 기능을 정부가 조세수입을 통해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러한 기능을 지닌 재정은 경제발전이 지속되고 인구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재정규모가 확대된다. 즉, 국가재정은 국방비, 사회·경제발전에 관련된 비용증가, 인구증가와 기술진보, 관료제하의 재정경직성,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의 예산 편성 등의 요인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팽창한다[19]. 따라서 제도적, 법적인 재정확충을 고려하지 않은 일시적인 확충은 국가의 지속적인 정책을 추구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주식매각을 통한 민영화 방법이 이러한 특징을 지닌 재정확충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확보는 정부세입과 경상수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부세입은 각 국가마다 사회, 경제적 구조

17) Armando Castelar Pinheiro & Ben Ross Schneider, p. 753.
18) 박 명광, 경제학 원론, 무역경영사, 1996, pp. 497-499.
19) 김 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1990. pp. 32-35.

에 따라 구성요소와 구성비에서 차별성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국고의 대부분은 세입으로 충당되고 일부는 경상수익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상수익은 공기업의 운영, 정부 서비스 부분의 수익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경상수익은 거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공기업을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 공공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 공기업에 대한 투자와 운영비가 정부지출에서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민영화가 재정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

이러한 정부재정은 세입으로 충당되고 정부지출은 예산확정 과정을 통해 집행되는 예산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예산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이던 재정균형을 상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균형적인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운영에서는 일정정도 적자운영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누적된다면 국가의 재정위기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재정위기는 브레세르가 지적한 것처럼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재정위기가 민영화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민영화가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으로 인식된다[20].

브라질의 경우에 이러한 재정적자[21]의 규모나 누적수준이 증가하여 국가경제를 통괄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있어 통치력의 누수현상이 나타난다.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긴축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긴축정책은 국가의 경제정책 추진의 기구로

---

20) Armando Castelar Pinheiro & Ben Ross Schneider, "The Fiscal Impact of Privatization in Latin America", The Jo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31, No. 5, June 1995. p.752.

21) 재정적자는 통상적인 적자(Conventional Deficit) 인플레이션에 매우 민감하다. 국제 수지 균형 상태와 관련되는 운영적자(Operational Deficit), 비영리 지출과 통상적인 세입의 상태에 따른 본원적 적자(Primary Deficit)로 구분된다. 본원적 적자는 실질 이자율지급이 전체수요,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적자를 이러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Vito Tanzi(1992), p.648

서 운영되는 공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적자운영으로 필요한 재정을 내채나 외채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를 탈피하기 위해 현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

1980년대 브라질 재정불균형의 원인을 첫째, 1982년의 국제이자율 상승과 대외신용도의 하락을 동시에 파생시킨 외채위기, 둘째, 국내총생산 대비 중앙정부의 부채증가와 관련된 공공부채 부담의 증가, 셋째 높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Tanzi효과와 도피자본의 증가와 같이 발생한 조세업무의 붕괴 넷째, 1985년 신공화국의 시작이후 정부지출의 증가 다섯째, 연방의 체질개선과 연금 수혜에 관련된 새로운 세금을 규정하는 신헌법의 효과들을 지적한다[22]. 재정불균형의 원인은 공기업에 대한 지출증가나 아니면 정부투자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브라질 경제가 안고 있는 세제상의 문제나 사회보장 확대에 따라 발생했다.

그러므로 브라질의 재정적자는 무역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와 같은 구조 조정 적인 측면의 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개혁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개혁에는 법적인 기초에서 행정, 세제, 금융개혁과 같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브라질의 민영화 추진과정

3.1 1979-1989: 탈국가화 프로그램의 초기단계

브라질의 민영화는 1979년 탈관료화 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Desburocratização)의 추진과 함께 시작되었다.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

22) Fabio Giambiagi, A Crise Fiscal da União: O Que Aconteceu Recentemente?, Revista de Economia Politica, Vol. 17, No 1(65), Janeiro-Março/97. pp. 61-62.

의 국가들에서 추진되는 민영화도 국가개혁 프로그램의 일부로 운영된다. 1980년대의 민영화는 피게레이두 정부와 사르네이 정부 동안에 추진된 것으로 "국가안보" 및 "민족주의"라는 2두가지 요소가 민영화에 제약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23].

1981년 민영화 특별위원회(Comissão Especial de Privarização)를 통해 43개의 민영화 대상 기업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파산으로 인해 정부관리하에 있었던 기업들이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가 아니라 파산기업의 정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위원회를 통해 3년 동안 사적인 부분으로 이전된 기업은 18개였고, 14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 합병되었으며, 3개 기업은 해당 주정부로 이전되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은 정부내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인해 많은 장애를 받았다. 그러나 피게레이두 정부 기간동안 1981년 530개 이던 공기업을 1984년 420개로 줄임으로써 110개의 공기업을 민영화 시켰다.

1985년 11월 사르네이 정부는 부처간 민영화 심의회(Conselho Interministerial de Privatização)를 구성하고, 민영화를 자본주식의 부분적 출자, 최소한도의 주식양도와 기업폐쇄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시켰다. 그러나 민영화를 통한 재정확보는 공기업의 자산총액의 0.6%의 수준에 거쳤다. 1988년에는 민영화를 확대할 목적으로 95,886법령을 통해 탈규제와 공공 서비스부분의 허용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법은 공공부분이 수행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민간으로 이전할 것, 재정적자를 감소할 것, 기업의 자본소유권 보급을 촉진할 것, 공공 서비스의 양도 및 양허를 허용할 것과 헌법상으로 독점이 보장되어 있어 공기업에 의해 배타적으로 수행되는 경제활동에 대한 민영화를 촉진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24].

또한 민영화를 추진해 오던 부처간 민영화 위원회를 민영화 연방 심의회(Conselho Federal de Desetatização)로 대체시켰다. 그러나 사르네

23) 정 선우, "브라질의 민영화 추진형황과 향후전망, 지역경제, 1997. 2. pp. 95-96.
24) 정 선우, 브라질의 민영화 추진현황과 향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p. 37

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5개의 기업을 민영화시켰는데 이들 기업은 모두 민간소유 기업으로서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브라질 경제개발은행에 의해 인수되었던 기업들을 재민영화 시킨 것이었다.

(표1) 500대 기업중 연방과 주정부 소유 기업 현황(1990년기준)

순 위	연 방	주	총 계
1-100	24	4	28
1-10	6	0	6
101-200	7	3	10
201-300	15	4	19
301-400	9	10	19
401-500	7	5	12
총 계	62	26	88

출처: Sarvia 재인용

연방법을 통해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데에 필수적인 과정 설정, 각 각 단계별 과정들을 공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민영화 대상기업들은 기업의 규모 면에서나 민영화 추진성과 면에서 제한적인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사르네이는 전통적인 발전정책 유지를 통해 경제회복을 달성하려는 견지에서 민영화를 추진했다. 그러므로 이전의 국가주도 발전모델에서 주장하는 이런바 전략산업,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부분에 대한 민영화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정책추진을 통해 정치적인 지지를 획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발전모델에서 이탈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1988년 신헌법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25]. 이러한 법적, 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민영화를 통해 확보된 재정적인 수익은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

하지는 못했다.

3.2 1990- 민영화의 심화와 확대

1990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된 브라질 민영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원리적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이전의 민영화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외국인 자본의 참여를 인정한다. 즉, 외국자본을 의결권주의 40%까지 인정하고 있다. 둘째, 민영화 프로그램과 함께, 관세인하와 탈규제화를 포함하는 브라질 경제개방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의 증대, 국가의 비중을 축소하고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26].

이러한 1990년대의 민영화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꼴로르의 철강과 석유화학, 까르도주 정부의 사회간접 자본을 포함한 광업부분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꼴로르 정부는 무역과 산업정책(PICE, Política Industrial e de Comércio Exterior)의 일환으로 탈국가화 프로그램(PND, Progama Nacional de Desestatização)을 도입하여 공공재정의 개선 및 경제전반의 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경제에 있어서 전략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거나 기업재정이 부실한 공기업을 우선 대상기업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꼴로르는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재구성했다. 4명의 정부관료와 7명의 사적인 인원으로 민영화 관리위원회(Comissão Diretora de Desestatização)를 구성하고, 경제 사회 개발은행(BNDES, Banco Nacioanl de Econômi e Social)에서 민영화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했다.

---

25) Sarvia는 브라질 민영화에 대한 법적인 발전과정과 추진현황을 민영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1979-85년, 부처간 민영화 위원회의 1985-88년, 민영화 연방위원회의 1988-90년, 1990년 이후의 꼴로르의 민영화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Enrique Saravia, "Privatization in Brazil", V.V. Romanadham(ed), "Constrains and Impacts of Privatization", N.Y, Routledge, 1993.

26) Ricardo Caldas, pp. 6-7.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민영화는 국가주도 경제성장모델에서 산업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고려되었던 철강, 석유화학과 비료산업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민영화가 산업부분별로 추진되었다는 특징과 함께 공기업을 구매하는데 있어 민영화 채권을 이용했다.

1994년 석유화학 부분의 민영화가 종결되었고, 공공 서비스부분으로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었다. 전기회사(Light e Escelsa)와 연방철도회사(Rede Ferroviária Federal)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단계의 민영화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전기회사의 민영화는 민영화의 확대와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1993년 중반부터 민영화 범위를 확대할 목적으로 법적으로는 첫째, 민영화 채권으로서 이용되는 연방부채에 대한 신용의 확대 둘째, 사회채권의 형성 제안 셋째, 연방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지분의 판매 넷째, 민영화 수단에서 브라질 화폐의 확대 다섯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을 제거 여섯째, 투명성이 유지되는 프로그램의 신속성을 담보해주는 등의 변화가 진행되었다[27].

까르도주의 민영화는 재정지출을 삭감함으로써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는 재정적자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하여 획득되는 민영화에 따른 매각수입을 재원으로 확보, 활용함으로써 공공부분의 채무 상환의 부담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와 함께 국제수지의 건전화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원료 및 인프라의 비용 절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강조한 민영화는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28].

이와 같은 민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들은 1995년 말 민영화의 긍정적인 결과로 목표를 수정하게 된다. 즉, 경제의 경쟁력 강화, 대외무역

27) Elena Landau, pp. 228-229.
28) 정선우 1996, pp. 47-50.

과 산업 근대화를 통하여 성공적인 국제화와 현대화를 촉진한다. 국가경제의 병목부분을 제거하여 사회간접자본 부분에 있어 사적인 투자에 대한 규제와 재정을 조정한다. 국가재정비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탈국가화 심의회(Conselho Nacional de Desetatização)가 탈국가화 기금(Fundo Nacional de Desetatização)과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중소기업의 재정계획과 시행을 보조한다. 지역발전과 고용문제에 우선권을 둔 사회정책을 실시한다[29]. 이러한 조치들은 민영화의 진행단계에 있어 최종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국가행정력이 사적인 부분의 경제활동을 보조하는 수준으로 낮추어지고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부분에 대한 행정력과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표2) 연도별 민영화 현황 (US$ 백만)

년 도	기 업 수	판 매 수 입	전 환 부 채	총 계
1991	4	1.614	374	1.988
1992	14	2.401	982	3.383
1993	6	2.627	1.561	4.188
1994	9	1.966	349	2.315
1995	8	1.003	625	1.628
1996	11	4.080	669	4.749
1997년 5월	1	3.277	4.287	7.564
총 계	53	16.968	8.847	25.815

출처: BNDES, 1997, 민영화 자료

29) BNDES, 1997년 5월 via Internet

(표3) 산업부분별 민영화 결과(US$ 백만)

부분별	판매수입	전환 부채	총계
철강	5.561	2.626	8.187
석유·화학	2.698	1.003	3.701
비료	418	75	493
전기	2.757	588	3.345
철도	1.477	-	1.477
광업	3.132	4.287	7.419
기타	350	368	618
총계	16.968	8.847	25.340

출처: BNDES, 1997년 민영화

이러한 민영화과정이 추진되면서 지불방법에 대한 논의들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지불방법은 ㄱ) 국내통화: 헤알 ㄴ) 농업부채의 채권(TDA) ㄷ) 국가발전기금 부담(OFND) ㄹ) Siderbar 증권(SIBRAR) ㅁ) 민영화 채권(CP) ㅂ) 재협상된 연방정부으로부터의 국내 부채(Disec)

ㅅ) 주택부금 채권(CEF) ㅇ) 외채 채권(Divex)등이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지불방법들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4. 재정구조의 변화

4.1 국가주도 경제발전 모델에서의 재정구조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모델에서 공공부분의 역할이 사적인 부분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고 촉진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다. 이는 정부가 재정구조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 모델에서 국가의 재정은 소폭의 적자운영을 전제로 한

다. 소폭의 재정적자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쉽게 극복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재정적자를 비롯하여 적자보존을 위한 부채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중앙정부가 책임을 진다. 이러한 특징들이 재정구조의 변화 이전에 브라질이 지니고 있던 특징이기도 하다.

국내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만성적인 적자는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이는 명목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명목이자 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만성적인 적자를 급격하게 증가시킨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가격을 통제하는 국가에서는 GDP 대 만성적인 재정적자 비율이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1986년 끄루자두 플랜을 재정조정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인 정책들이 실질적인 재정확보를 증가시키고 안정성을 가져오는 세제개혁을 실시하는데는 장애요소로 작용한다[30]. 또한 국가주도 경제성장 모델에 있어 주정부나 지방정부 재정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연방정부가 세제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주나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공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주정부 은행을 통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중앙은행에서 주어진다. 브라질의 중앙은행은 대부분의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중앙은행을 이용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자율성이 약하다.

이러한 재정구조에서 민영화를 통한 국가재정도 연방정부가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민영화를 위한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79년-1989년기

30) Vito Tanzi, "Fiscal Policy and Economic Reconstruction in Latin America", World Development, Vol.20, No.5, 1992, p. 648. 지속적인 재정적자 환경에서 가격통제는 결국 통화금지(Demonetization)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경제의 재정적인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Eliana A. Cardoso, "Deficit Finance and Monetary Dynamics in Brazil and Mexico", Jo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37, 1992, p. 189

간은 아래 <표 4>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민영화를 통해 확보되는 세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제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표4) 1979-1989년까지 민영화를 통한 세입증가(단위, 백만달러)

	1979	1980	1981	1982	1987	1988	1989
세입액		34	125	31	22	407	86
GDP 비율		0.01	0.05	0.02	0.01	0.12	0.02

출처: Armando Castelar Pinheiro & Ben Ross Shcneider p. 754

이는 민영화를 통해 확보된 실질총액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브라질의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1982년의 3천1백만 달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2%였는데 1989년에는 8천6백만 달러가 여전히 GDP 대비 0.02%에 해당한다. 1989년의 민영화를 통한 세입은 당시 정부가 지니고 있던 국내부채의 비율(0.83%)에도 미치지 못한다[31].

4. 2 민영화 추진에서의 재정구조

사실 브라질의 재정구조의 변화와 재정부분에 대한 정부통제의 변화는 1988년 신헌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재정부분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는 신헌법이 시행된 이후 몇 년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브라질의 신헌법은 공공서비스의 재정과 조항, 경제활동의 규제에 있어 정부의 다양한 수준에서 각각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신헌법에 소개된 새로운 재정연방주의는 안정화의 도구로서 운용되는 재정정책에 있어 연방정부를 엄격히 제한시키고 있다. 반면에, 통화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는 개

31) Eliana A. Cardoso, Deficit Finance and Monetary Dynamics in Brazil and Mexico, Jo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37(1992) p. 192.

선되었다[32].

1990년 꼴로르는 집권이후에 꼴로르 플랜(Plano Collor)을 통해 안정화 정책을 추진했다[33]. 재정적자의 감축을 위해 정부는 28개 부처를 12개로 줄였고, 24개의 소규모 정부기관과 재단을 폐쇄했고, 정부재산을 매각했으며, 또한 공무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한편으로는 세제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불확실한 재정투자와 지참인불 수표(Bearer check)는 백달러 이상을 초과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은 세제회피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었고, 정부는 주식, 금, 저축에 대해 등가세(One-time tax)를 부과했다. 정부의 세입은 등가세 재정수입과 봉쇄된 화폐(Cruzado novo)에 대한 세금의 선지급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의 지출은 부정적인 실질 이자율과 제한된 외채지불로 인해 감소했다. 이러한 이유로 연방정부의 국고현금유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목적는 GDP의 8%에 달하던 적자를 1990년 말까지 1-2%의 흑자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은행예금 동결을 통해 적자보존 비용을 줄이는 것외에,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7개의 특징적인 정책들을 실시했다[34]. 이러한 정책 중에 GDP의 2..5%까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민영화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민영화는 의회

---

32) Antúlio Bomfim & Anwar Shah,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the Division of Power in Brazil: Perspectives for the 1990s", World Development, Vol 22, No 4, 1994, p. 535

33) 꼴로르 플랜은 화폐개혁, 재정조정, 가격과 임금의 안정, 무역자유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Eliana A. Cardoso, p.193.

34) 1) 금융거래에 부과되는 금융거래세(IOF: Imposto sobre Operações Financeiras) 부과 2) 정부가 60억불을 저축하고 있는 전국의 은행 3일간 휴일을 감독 3) 정부세입이 원료, 전기, 전화, 우편서비스와 같은 국가생산 제품(State-Produced Goods) 가격상승에 의해 증가했고. 4) 새로운 소득세가 농업부분에 부과됨, 5) 사적 기업에 제공되는 정부의 주요 보조금을 줄이거나 폐지, 6) 다수의 공무원을 희고 하는 행정개혁을 추진했다. Dader Nazmi, "Inflation and Stabilization :Recent Brazilian Experience in Perspective", The Jornal of Developing Areas, 29 (July 1995), pp. 499-500

와 노동부분의 거센 반대로 기대되었던 것보다는 느리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명목세입에서 4배정도의 증가를 달성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통해서나 시민과 기업의 은행예금 동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35]. 그러나 아래표<표3>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1991-93까지 민영화를 통해 확보된 세입은 GDP대비에서 90년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한 증가를 보인다. 그러나 민영화를 통한 세입증가는 민영화가 이루어진 그해에만 증가된다. 그것은 민영화가 국가 재정수입이라는 측면에서는 한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표5) 1990-1995까지의 민영화를 통한 세입증가(단위: 백만달러)

	1990	1991	1992	1993
세수액		1,635	2,368	2,531
GDP비율		0.4	0.6	0.6

출처: Armando Castelar Pinheiro & Ben Ross Shcneider p. 754

이러한 한시적인 결과는 국가가 사회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국가개혁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없다. 국가 세입의 장기적인 확보는 세제개혁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개혁에는 민영화를 추진할 때와 같은 정치적인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1993년 6월 재무장관인 까르도주가 긴급행동 프로그램(Programa de Açāo Imediato)을 통해 재정조정을 위한 예산 재편성법을 제언했다. 이를 계기로 1994년 예산법이 의회에서 논의되었다. 이 법안에는 국가재정의 증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던 부분을 주와 지방정부로 이전시켰다. 이에 따라 1989에서 1995년 사이 운영적자는 GDP의

35) 앞의 책, p. 501

2.0%인데 반해 통상적인 적자는 GDP의 4.5%에 이른다.

1990년에서 1995년기간 경제부처들이 통제로 연방정부의 계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국고의 세제 수입이 GDP의 3% 정도로 증가했다. 1995년에는 일시적인 수익, 헌법적인 이전(주와 지방으로의 이전)과 개별적인 지출과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사회보장과 보건부의 부처간 경쟁은 여타 정부부처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켰다. 1988-1995년 연방정부의 부채지불총액은 GDP의 3.7%에서 7.8%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연방정부보다는 주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로 인해 발생했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1995년에 상당히 증가한 주와 지방정부, 공기업의 적자를 축소시키는데 두어야 한다[36].

5. 맺는 말

국가가 추진하는 민영화는 국가개혁을 대전제로 하고 있고, 재정적자를 축소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민영화를 통한 세수입은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는 정부가 공기업을 매각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Swap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직접적인 수익은 적지만,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정부가 이자지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강조된다.

또 다른 방법은 직접매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수익을 국가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당해 연도의 재정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민영화하는 대상 기업에 대한 논의가 국가재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브라질의 민영화와 재정적자의 극복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36) Fabio Giambiagi, pp.69-70

분석했다. 브라질의 민영화는 국가개혁의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의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발전모델 때문에 느리게 진행되었다. 브라질은 1988년 신헌법을 기점으로 하여 발전모델 전환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1990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민영화는 산업 부분별로 추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부분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민영화가 브라질 정부가 정책목표 설정했던 재정적자 축소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여전히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브라질은 1990년대에 들어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는 민영화를 통한 부분보다는 연방정부가 국가개혁 논리로 표방하고 있는 감양운영(Operaçã Desmonte)를 통해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따른 한편으로는 주와 지방정부로의 세금부과 세금징수에 대한 권한을 일부 인정해 줌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와 지방정부의 이러한 기능의 이전은 행정력을 지니지 못한 주와 지방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신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8.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1990.

대한 상공 회의소,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 · 민간 부문의 역할 재조정, 한국 경제 연구 센터, 1995.

박명광, 경제학 원론, 무역경영사, 1996,

정선우, 브라질의 민영화 추진현황과 향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Abreu, Marcelo de P, Werneck, Rogeiro L.F, "Privatization and Regulation in Brazil :The 1990-1992 Policies and the Challenges Ahead" Quaterly Review of Economic and Finance,

Vol, 33. Special (Winter 1993) pp. 21-44

Armando Castelar Pinheiro & Ben Ross Schneider, "The Fiscal Impact of Privatization in L. A", Jornal of Developing Studies, Jun 751-785.

Ben Ross Scheider, "Partly for Sale: Privatization and State Strength in Brazil and Mexico", Jo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30. No, 4. Winter, 1988-89.

Dader Nazmi, "Inflation and Stabilization :Recent Brazilian Experience in Perspective", The Jornal of Developing Areas, 29, July 1995

Elizabeth McQuerry, "Private Sector Responses to Economic Liberalization Policies in Brazil: a Look Within São Paulo's Capital Goods Sector", Revista de Economia Política, Vol. 16, No 3 (63), Julho-Setembro/96

Favio Giambiagi, "A Crise Fiscal de União : O Que Aconteceu Recentmente?", Revista de Economia Política, Vol 17, No 1(65), Janeiro-Março/1997.

Jessica G. Nembhard, "Capital controls and long-term economic growth", Ann Arbor : U. M. I., c1992.

João Paulo dos Reis Velloso(ed), "Estabilidade e Crescimento : Os Desafios de REAL", Rio de Janeiro, José Olympio Editora, 1994.

Jonas Prager, "Is Privatization a Panacea for LDCs? Market Failure versus Public Sector Failure", The Jornal of Developing Areas, 26, (April 1992)

Manuel Sanchez & Rossana Corona, "Privatization in Latin America", Washington D.C,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1993

Mary M. Shirley, "Privatization in L.A :lessons for transitional Economic", World Development, Sep. 1994.

Pinheiro, A. C. & Giambiagi, F, "Brazilian Privatization in the 1990s", World Development Vol. 22, No.5 (May 1994), .

Ricardo Caldas, "Privatization in Brazil", Brazil Center Speakers Series, Univ of Texas at Austin, 1995.

Sergio R.R. Prado, "Intervenção Estatal, Privatização e Fiscalidade :Um Estudo Sobre a Costituição e Crise do Setor Produtivo no Brasil e Os Processo de Privatização a Nivel Mundial". Campinas, Dezembro de 1994.

Suleiman, Ezra N.,,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Sector Reform and Privatiza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0.

V. V. Ramanadham, "Constraints and impacts of privatization", London, Routledge, c1993

Vito Tanzi, "Fiscal Policy and Economic Reconstruction in Latin America", World Development, Vol.20, No.5, 1992,